

민주 “15조로 확대해야”… 국힘 “李 대선용 안돼”

조기대선 정국 속 추경 힘겨루기 민주 “내수진작 위해 반드시 증액” 국힘 “액수보다 현장 투입 시급” 지역화폐 예산 반영도 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뤄지는 추경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처리 과정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절름추경’이라고 규정,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

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추경은 영남권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돼 비상계엄 사태로 장기화한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제안했던 35조원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 영역이 가장 컸으나, 이번 정부 추경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내수 진작 영역에서 반드시 증액해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지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

서 일제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추경을 대폭 증액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국민의힘은 통상·인공지능(AI) 정책 지원, 재해·재난 대응, 민생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 민생 예산이다 들어 있는데, 더 보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추경 액수보다 현장에 돈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경으로 키워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주장을 ‘대선용 포퓰리즘’,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파적인 추경보다는 산불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 소외 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2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누가될까? 2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당 관계자가 대선 경선 후보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韓 대행 “대선 출마 아직 결정 안내려”

英 FT와 인터뷰서 “노코멘트” 김민석 “출마할거면 사퇴하라”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도 출마설이 제기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판하며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한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즉각 밝혀야 한다. 출마를 할 거라면 오늘 당장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출마 명분을 잡으려고 권한도 없는 졸속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 공직 사퇴 시한(5월 4일)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전광훈 대선 출마에 “퇴출 대상이 극우 선동”

“헌법과 법치주의 대놓고 조롱”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 당해야 마땅한 인물이 마치 시대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착각에 빠져 극우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전 목사는) 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외치고 헌법재

판관 척결, 국회 해체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인물”이라며 “스스로 헌법기관 해체의 집행자가 되겠다고 폭주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퇴출이다. 윤석열, 전광훈,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모두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대선주자들, ‘용산 대통령실 사용 여부’ 이견

李 “용산→청와대→세종” 단계적 2금 “용산 불가” 증세·원전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선 세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20일 세 후보의 TV 토론회와 공약·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모두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에 공통분모를 형성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공동분모를 형성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이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용산 대통령실 및 청와대 사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달리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증세 등 조세 정책을 두고도 입장이 상반된다. 두 김 후보는 국가의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세 카드’를 들고나왔으나, 이 후보는 지출 조정이 먼저라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의 부담을 민감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등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두 후보는 “그렇게는 재정 확보가 어렵다”(김경수), “지출 조정 전제는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은 정직하지 않다”(김동연)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원전’을 두고도 입장차를 나타냈다.

이 후보 캠프 안규백 특보단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자 세계적 흐름”이라며 “앞으로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의 적정 수준 관리를, 김경수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단계적 축소를 주장하며 이 후보와 결이 다른 모습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민간 자문단 운영

국토부, 오늘부터 전문가 20명 구성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 21일부터 운영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법은 공포 2개월 뒤 시행되지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되는 주요 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추모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문지식 제공 △질의 조력 △해설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진행하며, 유가족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사조위의 답변 등을 오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원한다.

또한 사조위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조사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서울=김선욱 기자